

선동주 헌법

2015년도 사시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수정사항

< 제 1 회 >

☑ 32번 ① 지문 수정

① 제2차 개정헌법(1960년)은 ~ ⇨ 제2차 개정헌법(1954년)은 ~

☑ 32번 ② 해설 수정

② 이익분배규점권은 1948년 건국헌법에서 채택되었다가 1952년 제5차 개헌에서 삭제되었고,
⇨ 이익분배규점권은 1948년 건국헌법에서 채택되었다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삭제되었고,

☑ 34번 ㄱ. 지문 수정

ㄱ. 제3차 개정헌법(1980년)은 ~ ⇨ 제3차 개정헌법(1960년)은 ~

< 제 2 회 >

☑ 2번 정오표시 및 정답 수정

ㄴ. 101 / 정답 ③

☑ 21번 해설 배열 수정

ㄱ. ⇨ ㄷ. / ㄴ. ⇨ ㄹ. / ㄷ. ⇨ ㄴ. / ㄹ. ⇨ ㄱ.

< 제 5 회 >

☑ 15번 ④ 지문 수정

④ ~ 감사청구한 주민을 제외한 다른 계속 중에 다른 주민은 ~ ⇨ ~감사청구한 주민을 제외한 다른 주민은 ~

☑ 26번 정오표시 및 정답 수정

① 101 / 정답 ①, ③

< 제 6 회 >

☑ 6번 정오표시 및 정답 수정

④ 1×1 / 정답 ④, ⑤

< 제 7 회 >

☑ 13번 ㄴ. 지문 수정

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모두** ~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모두** ~

< 제 9 회 >

☑ 14번 ③, ④ 해설 수정

③ | ○ |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의 요건은 기술적·물적 또는 인적인 것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구조적 규제의 일종인 진입규제로서의 이 허가제는 방송의 기술적·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송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표현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에 입각한 사전봉쇄를 위한 것이거나 그와 같은 실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5.31. 2000헌바43등).

④ | ○ | **최소 3년** 심판대상조항은 여론조사결과와 보도나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의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실시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료이다.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완요구권을 갖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고의무의 부과가 청구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여론조사 실시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없다.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된 이후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사후심의를 할 수 있고, 형벌, 과태료의 사후적 제재도 가능하나, 여론조사결과가 일단 공표·보도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쳐 선거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불공정·부정확한 여론조사의 폐해를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4.30. 2014헌마360).

☑ 34번 ④ 해설 수정

④ | ○ | 총장선임권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법률 또는 당해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총장선임권 또는 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학교법인의 총장선임행위를 다룰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5.31. 95다26971).

/Confer/ 전통적으로 대학자치는 학문활동을 수행하는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가 누려오는 것이었고, 현행법상 국립대학의 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1990년대 이후 국립대학에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직접선거방식이 도입된 이래 거의 대부분 대학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대학의 장을 임명하여 옴으로써 대통령이 대학총장을 임명함에 있어 대학교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6.4.27. 2005헌마1047등).

☑ 39번 정오표시 및 정답 수정

ㄷ. 101 / 정답 없음

< 제 11 회 >

☑ 22번 정오표시 및 정답 수정

① 101 / 정답 없음

< 제 12 회 >

☑ 16번 해설 수정 및 정답 수정

- 해설 수정

ㄱ. 101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기본권이다(헌재 2008.9.25. 2005헌마586등).

ㄴ. 1×1 **최인 3년*** 연차유급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고,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비록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휴양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연차유급휴가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된다. ...유급휴가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국가적 노동 상황, 경영계(사용자)의 의견, 국민감정, 인정 대상자의 업무와 지위,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유급휴가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고, 어느 경우에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입법자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이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15.5.28. 2013헌마619).

- 정답 수정 : 정답 없음

< 제 15 회 >

☑ 9번 정오표시 및 정답 수정

ㄷ. 101 / 정답 없음

< 제 16 회 >

☑ 24번 정오표시 및 정답 수정

④ 1×1 / 정답 ①, ④

< 제 18 회 >

☑ 9번 해설 수정 및 정답 수정

- 해설 수정

- ② | ○ |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보장과 객관적 헌법보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써 자기관련성을 구비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헌재 2001.11.29. 99헌마494).
- ③ | × |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라야 하므로, 공권력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1993.3.11. 91헌마233). 그러나 공권력작용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공권력작용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헌재 1994.6.30. 92헌마61). 침해적 규정의 경우 법령의 수급자가 당사자로서 평등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수혜적 규정의 경우에는 수혜의 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평등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평등권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자기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청구인이 법령의 수급자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이다(헌재 2005.6.30. 2003헌마841; 헌재 2013.12.26. 2010헌마789).

- 정답 수정 : 정답 ③, ④

☑ 14번 정답 수정

정답 ④, ⑥